

2014 지방 7급

# 지방자치론

해설 : 이동호 교수

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정답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가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세원의 배분비율이 맞는 표현이다.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①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직위의 선임방식
- ③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 대비
- ④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 대비
- ⑤ 국세와 지방세 수입 대비: 국가와 지방 사이의 세원의 배분비율
- ⑥ 국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 ⑦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
- ⑧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⑨ 감사 및 보고의 회수

## 02. 「지방자치법」 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 |         |           |
|---------|-----------|
| ① 재의요구권 | ② 서류제출요구권 |
| ③ 제소권   | ④ 선결처분권   |

정답 ②

②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결기관(지방의회)의 통제수단이다.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문제를 반대해석해서 풀면 정답을 고르기가 오히려 빠를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03.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
- ③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정답 ②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으나, 시·군·구의 사무를 고르면 된다. 따라서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반대해석하면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04.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③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 ③

협력적 정부 간 관계는 신지방분권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지방분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분권화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간관계는 대등하고 자율적인 협력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협력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신중앙집권화와는 거리가 멀다.

## 05.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정답 ①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에 따라 경비의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0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다.
-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 07.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Tiebout)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
-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③ 상이한 가격(조세)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답 ①

티보(Tiebout)의 가설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제이다. 따라서 중앙집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된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필요하다. 티보의 가설의 기본 원리만 알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다. 다시 말한다. 기본이 중요하다.

## 0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
-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주체를 돌려서 문제를 만든 출제유형이다. 기준자체는 안전행정부가 산정한다. 이 기준마저 지자체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
-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 정답 ①

부담금은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처리되며 중앙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 경우에 수임기관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의무적인 교부금(위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10.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 ④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합의 보전
-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11.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의사결정기관  | ㄴ. 입법기관 |
| ㄷ. 비판·감시기관 | ㄹ. 헌법기관 |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④

## 지방의회의 지위

- ① 헌법상의 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헌법(제118조)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주민대표기관
- ③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④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⑤ 의사결정기관: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나 주요정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⑥ 입법기관: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 ⑦ 행정비판 및 감시기관: 지방의회는 자신의 결정사항에 대한 행정의 집행을 감시·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에의 보고
- ③ 시·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이행명령

## 정답 ②

지방자치법 하에서의 통제방식으로는 ① 자치입법권에 대한 통제, ② 자치조직권에 대한 통제, ③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 ④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 ⑤ 기능과 권한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③, ④는 자치행정권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며, ②는 자치재정권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

## 13.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

- |                |              |
|----------------|--------------|
|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   |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 |
|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 ④ 공공성의 강화    |

## 정답 ④

제3섹터(민관공동출자사업)은 민간적 요소와 정부적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공동 경영을 함으로써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 담을 경감시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문 중 방향이 반대인 것을 고르면 정답이다.

공공성의 강화는 행정국가시대의 논리이며, 나머지는 신행정국가시대의 논리이다. 이렇게 고르면 빨리 정답을 고를 수 있다.

## 14. 「지방자치법」 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 |             |            |
|-------------|------------|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② 행정협의회    |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 ④ 시·도지사협의체 |

## 정답 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③, ④는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다.

## 15.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
-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 정답 ④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치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당해 지역의 설정은 당해 자치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행정학이나 그 각론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론 모두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 16.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
-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 정답 ③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 17.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정답 ③

①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감사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④ 주민투표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주민투표법 제3조 제1항).

## 18. 「지방자치법」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26조 제 9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
-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정답 ③

정답을 고를 때 비교문장부터 확인하라고 하였다.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적 재화와는 달리 공공재의 경우에는 타인의 공동 소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무임승차문제라 한다.

##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답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변경, 폐지·설치·분합	법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한자 명칭 변경	대통령령
행정시, 행정구·읍·면·동·리의 폐지·설치·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조례